

페루, 강제불임시술 재수사에 착수

강정원

페루 검찰청은 과거 후지모리 정부가 추진한 강제불임시술 합병증으로 사망한 마리아 차베스(María Chávez)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10월 21일 발표함에 따라, 후지모리 정부의 불임시술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페루 전역에서 시행된 불임시술은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청(USAID)과 유엔인구기금(UNFPA) 등 국제기구로부터 약 500억 가량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346,219명의 여성과 24,535명의 남성이 불임시술을 받았고, 이 가운데 55퍼센트는 경찰과 무장세력을 동원하여 강제 시술을 하던 1996년과 1997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후지모리 정부의 불임시술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은 시술 대상의 약 95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30만 명이 케추아어를 사용하는 농촌의 여성이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시술의 성격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다(2001년 통계에 따르면 페루 농촌의 가임여성 수는 총 125만 명이다. 이 수치를 참고하면 농촌 여성의 약 24%가 불임시술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규모 강제 시술을 위해서 경찰과 무장세력을 동원하고, 의료진과 의료시설에 할당량을 부과하였다. 1999년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여성인권위원회’(CLADEM)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나다 페르소날>(Nada Personal)에 의하면, 페루의 지방 보건소에 할당된 의무 시술 건수는 보건소 직원 1인당 매월 2~3건으로, 만일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 삭감, 해고 등의 징계가 가해졌다.



강제불임시술을 고발하는 인권단체 활동가 (출처: DEMUS)

이러한 강제불임시술의 실상은 1999년 페루의 인권단체(DEMUS, APRODEH)와 여성인권관련 국제단체(CLADEM, CRLP, CEJIL)가 미주인권위원회(IACHR)에 마리아 차베스 사망과 관련해서 페루 정부를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마리아 차베스는 카하마르카에 거주하던 33세의 농촌 여성으로 1998년 시술 당시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마리아의 남편 하신토의 증언에 의하면, 보건소 직원들이 수차례 찾아와 수술을 강요했다. 또 새로운 법에 의하면 5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벌금을 내야하고 구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수술을 거부할 경우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수술 8일 후 마리아 차베스는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마리아 차베스 사건을 계기로 페루 정부는 2003년 미주인권위원회(IACHR)와 사건 해결 방안에 합의하고, 사망자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강제불임시술의 피해 사례 조사,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2003년의 조치는 페루 정부가 강제불임시술의 책임을 상징적으로나마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사례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2009년 공소시효 만료로 일체의 수사가 중단되었다.

페루 정부는 이처럼 지난 10여년간 강제불임시술 문제에 대해 회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은폐된 실상을 고발하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은 비단 마리아 차베스의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집중적으로 시술이 행해진 쿠스코의 안타(Anta) 구에서는 약 100명의 농촌 여성으로 구성된 ‘안타의 강제불임시술 피해자 연합’이 조직되어 적극적으로 피해 사례를 알렸으며, 페루 사법부와 국제사법기관 등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 조직에 소속된 사비나 우일카(Sabina Huillca)는 시술을 받던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넷째 딸 아이를 출산한 후, 의사를 만나려고 보건소에 갔어요. 의사는 불임시술을 권했습니다. 전 싫다고 했죠. 그러자 의사는 아이를 더 낳으면 키울 수도 없는 지경이 될 텐데 어리석다고 하더군요. 잠시 침대에 누워 쉬고 있을 때,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놓았습니다. 마취주사였는데, 아무도 내게 말 해주지 않았어요.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손발이 모두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눈을 떠보니 마지막 남은 몇 바늘을 꿰매고 있더군요. 내게 무슨 짓을 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의 끝나간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나는 절망에 빠져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시술 당시 사비나의 나이는 28세였다고 한다. 사비나는 또한 시술 후의 고통을 이렇게 전한다. “그 후로 여자구실을 못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들 수도 없고, 밭일도 못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식사준비조차 못합니다. 걷는 것조차도 힘겨워요. 마을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여자를 멸시하죠. 그래서 마을에서 하층민 취급을 받게 됐어요.”(Angel Paez “Women Sterilized Against Their Will in Peru Seek Justice, Again”, *Upside down World*, 2010년 10월 19일자 기사 인용).

사비나의 사례처럼 불임시술과 전혀 관계없는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

을 찾아간 수많은 여성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에는 회복을 위한 어떠한 추가적인 의료조치나 처방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대부분 수술 직후 바로 농사일이거나 가사를 시작했으며, 몸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통증 등의 부작용 외에도 강제불임시술을 받은 여성이 남편에게 버림받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노동력과 출산능력을 상실한 여성은 마을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쓸모없는 존재로 무시당했다.

후지모리 정부에서 주로 원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된 강제불임시술은 출산과 관련한 페루의 불평등 구조, 특히 원주민 여성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페루는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산이 산모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 하지만 불법 낙태시술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시술 건수만 해도 매년 35만 건 이상에 이른다. 낙태의 불법화는 위험한 무면허 시술 행위가 지속되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농촌 빈곤지역의 여성이 특히 위험한 낙태 시술에 노출되어 있다. 2001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촌 빈곤지역의 여성 65%가 의료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에게 낙태 시술을 받고, 단지 3%만이 내과 의사에게 시술을 받는다. 반면에 도시중산층 여성은 77%가 내과 의사에게 시술을 받고, 단지 2%만이 무허가 의료인에게 시술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무허가 의료인에 의한 낙태시술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며, 농촌 빈곤지역 여성의 경우 100명당 44명이 낙태시술로 인한 합병증에 시달린다. 도시중산층 여성의 비율은 5명으로 집계되어 큰 대조를 보인다. 강제불임시술의 경우, 여성의 출산력에 공권력이 개입한 극단적인 사례라는 점 이외에도 저소득층 특히 케추아어를 사용하는 원주민 여성이 전적인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복합적인 상황을 시사한다.

현재 페루의 옴부즈만에는 2천 명 이상의 여성이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동의 없이 강제불법시술을 받았다고 등록한 상태이다. 이들은 지난 10년 이상 페루 법정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련자 처벌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게이코 후지모리와 우말라의 대선 토론회에서 후지모리 정부의 강제불법시술이 쟁점으로 부각되어 게이코는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이어 관련자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한 우말라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피해 여성들은 페루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고 있다. 페루 검찰청의 강제불법시술 재수사 방침이 포괄적인 피해사례 조사와 보상 및 관련자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강정원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